

▶ 전북도의회 도정 질의

“매년 수천명의 청년들이 전북 떠난다”

이현숙 “농업생산비 원가보전 정책 시행 의사 있나”

이도영 “공신·측근 챙기려 도자원봉사센터 정원 늘렸나”

한완수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일방적 지정 이유는”

이해숙 “청년수당제 도입을”

전북도의회는 12일 제337회 임시회에서 전북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송곳 질의를 펼쳤다.

이날 이현숙(비례), 이도영(전주2), 한완수(임실), 이해숙(전주5) 의원은 도정과 교육 현안 문제점을 따져 물었다.

○ 이현숙 의원 ▲삼락농정, 제대로 된 전북농업 해법 제시 ▲농촌지역에서 자행되는 환경문제 해결 촉구

이 의원은 “전북 농촌인구의 85%가 3ha 미만의 중소 농가임을 감안할 때 농업소득의 현실적 보전이 삼락농정의 핵심이 아닐까 한다”면서 “농업 생산비 원가보전 정책을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와 전북환경정책에 대한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지 대담해 달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화학농자재(농약, 비료 등)를 지원받는 것은 도 농정방향과 상충될 여지가 있고 도 재정형편상 쉽지 않은 정책이다. 또 환경정책 주민참여 문제는 환경정책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해결위원회 설치의 적절치 않고 다만 지역환경문제시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 이도영 의원 ▲초저출산 대책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문가 양성 ▲자원봉사센터 정치화 문제 등 질의

이 의원은 “민선5기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은 총 6명이었으나 민선6기 이후 두배가 넘는 13명이 되었다”며, “조직의 인원이 대규모로 늘어난 이유가 신규사업증가나 업무과다 보다는 선거과정에서 공신이나 측근들을 챙기기 위해 인위



12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7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송하진 도지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적으로 도자원봉사센터의 정원을 늘린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송하진 지사는 이와 관련 “전북은 타 시도와 달리 14개 시군의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 차량 2대와 밥차 2대를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 2배 이상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사무량 분석결과 업무량이 큰폭 증가해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조지개편과 인력 증원을 실시했다”고 답했다.

○ 한완수 의원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논란의 씨앗 잉태한 1999년 지정 문제점 ▲논란의 씨앗 반복한 재조정 결과 ▲상호갈등 요인으로 변질된 상생협력 선언서 등 질의

한 의원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논란은 당초에 적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지정이 이뤄졌는데 있다”면서 “당시 갑작스럽게 정읍시의 일방적인 의견을 수용해서 보호구역 지정 공고가 이뤄진 사유나 배경이 무엇이나”고 질의했다.

송 지사는 “정읍시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정에서 개발 가능성이 희박했고 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상수원관리규칙에 근거, 도원천을 배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간 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양 시군이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이해숙 의원 17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청년 실업 대책으로 ‘청년수당’ 도입을 송하진 지사에게 촉구

이해숙 의원은 “전주시에서만 매년 2천명의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고 있다”며 도내 전체로는 매년 수천명에 이르고 있음을 경고했다.

이 의원은 특히 청년들이 취업과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만 도의 청년 예산은 빈약하기 짝

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을 위한 몇 가지 사업비 증액으로는 청년 실업 등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노인기초연금처럼 청년수당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하진 지사는 “청년수당 제도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재정여건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여긴다”며 “현재,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3개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정부 차원에서 청년수당 지급 관련해 재원대책이 마련되면 타시도의 운영실태를 주시하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신광영 기자

정의당, 당명 유지기로
정의당은 12일 당원총투표 결과 ‘정의당’ 당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2차 임시 당대회에서 새 당명 후보로 민주사회당을 결정하고 찬반 투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의당은 투표권을 가진 당원 2만386

명을 대상으로 이날 초 온라인투표와 현장투표, ARS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당명을 ‘민주사회당’으로 개정하는 데 찬성한 당원은 30.79%(3,359명), 반대한 당원은 69.21%(7,552명)였다. 당명개정투표는 지난해 11월 ‘진보결집+’,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과의 통합과정에서 했던 합의에 따라 진행됐다. /뉴시스

“세월호 유가족 미행 경찰·국조 비협조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에 근정포장”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국정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거나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을 미행한 경찰공무원에게 훈·포장이 수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뉴스타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12월31일 대통령비서실 소속 조모 국무조정실 국장과 안산 단원경찰서장이었던 구모 총경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했다.

조 국장과 구 총경의 공적 사유는 각각 “국회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 현안 질의에 대한 충실한 자료준비와 대응”, “세월호 참사 완벽한 상황유지”였다.

조 국장은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진행했던 세월호 국정조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소속이었다. 당시 세월호 국정조사가 특조위 위원들이 요구한 289건의 자료 중 단 13건만을 제출하는 등 청와대의 불성실한 대응으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조 국장은 “충실한 자료준비”, “원활한 대국회 활동에 기여”를 이유로 서훈을 수여받았다.

구 총경은 2014년 5월19일 사복 차림의 안산 단원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형사 2명이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들을 미행해 사회적인 논란을 빚었을 당시 안산 단원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사건 당일 단원서 정보보안과 형사 2명은 안산에서 진도로 내려가던 유가족 30여명을 몰래 따라가다가 오후 7시30분께 눈치를 쬐 유가족들에게 붙잡혔다.

이에 대해 구 총경은 다음날 안산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아가 대기실에 있던 유가족들 100여명에게 공개사과한 바 있다.

조 국장과 구 총경 이외에도 2014년 12월31일 세월호 공적을 이유로 서훈을 받은 사람은 총 16인이었다. 이중 구조활동 후 귀환하다 헬기가 추락해 숨진 5명에 대한 서훈을 제외하면 나머지 11인은 모두 ‘세월호 완벽 상황유지’를 이유로 서훈을 수여받았다.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이었던 백 경정은 “세월호 집회의 안정적 관리”를 이유로,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소속이었던 조 경감은 “세월호 참사 상황 관련 정보활동 및 상황 완벽관리”를 이유로 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 의원은 “서훈은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수여 사유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에 확인한 세월호 공적 관련 상훈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민주당 “최순실이 누구냐고? 새누리당이 답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새누리당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최순실 씨와 차은택 감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정치국 세로 규정한 데 대해 “적반하장이다. 최순실이 누구인지 답해야 할 것은 새누리당”이라고 맞받았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철갑비호로 최순실, 차은택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마저 무산됐다. 그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최순실이 누군데 그리 목을 매느냐’며 야당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최순실의 국감증인채택을 그토록 집요하게 방해하면서 국회의 권위를 대놓고 무시한 새누리당이야말로, 최순실이 도대체 누구기에 대한민국의 굴지의 기업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거금을 모을 수 있었는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또 “권력 비선실체에 의한 국정농단의 사태가 이렇게 커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 비리의 실체가 국민의 상식과 예상을 넘어서기 때문”이라며 “국감과정에서 여러 증거들이 책임자를 드러내는 와중에도 정작 당사자들은 어떤 말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해발 400~800m 연평균 11.3°C
안전한 먹거리 반딧불이가 배당합니다!

제2회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대축제

여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우리의 장터입니다

기간 2016. 11. 04. (금) ~ 06. (일) 3일간
장소 무주군 예체문화관 일원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대축제 추진위원회 Tel: 063)320-2841~2